

# 이동식 놀이기구 등 임시영업 허가 합리화 방안

2008. 3

백지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이동식 놀이기구 등 임시영업 허가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8.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송재호**

백지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향후 발전여건과 정책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 역재, 복제할 수 없음

---

백지

## < 목 차 >

<b>제1장 연구개요</b> .....	<b>3</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수행과정 .....	4
1. 연구의 방법 .....	4
2. 연구의 수행체계 .....	4
<b>제2장 임시유원시설 영업 실태</b> .....	<b>9</b>
제1절 용어 정의 .....	9
1. 유원시설 .....	9
2. 임시영업 .....	10
3. 유원시설 설치 .....	11
제2절 임시영업 운영현황 분석 .....	13
1. 분석개요 .....	13
2. 분석결과 .....	15
제3절 안전사고 실태 .....	20
1. 조사 개요 .....	20
2. 조사 결과 .....	22
<b>제3장 임시영업 안전관리</b> .....	<b>27</b>
제1절 안전관리 .....	27
1. 주체별 역할 .....	27
2. 인·허가 절차 및 기간 .....	28
3. 안전성검사 .....	29
4.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34
제2절 안전교육 .....	36

<b>제4장 전문가 의견 조사</b>	<b>43</b>
제1절 전문가 심층면접	43
1. 조사개요	43
2. 조사결과분석	44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48
1. 조사개요	48
2. 조사결과 분석	49
 <b>제5장 종합분석 및 시사점</b>	 <b>59</b>
제1절 종합분석	59
1. 임시영업의 문제점	59
제2절 시사점	61
 <b>제6장 개선방안</b>	 <b>67</b>
제1절 기본방향	67
제2절 개선방안	67
1. 허가 전 검사 강화	67
2. 관리 운영단계 보완	72
3.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75
 <b>참고자료(전문가 설문)</b>	 <b>80</b>
<b>참고문헌</b>	<b>88</b>



## < 표 차 례 >

[표 2-01] 유원설치관련 법·제도 .....	11
[표 2-02] 조사 대상 개요 .....	13
[표 2-03] 월별 임시영업 현황 .....	15
[표 2-04] 임시영업기간 .....	16
[표 2-05] 지역별 축제·행사지역 토지용도 .....	17
[표 2-06] 업체별 운영횟수 .....	18
[표 2-07] 기구별 운영횟수 .....	19
[표 2-08] 안전사고 실태(2002년~2007년) .....	20
[표 2-09] 한국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안전사고(2005년~2007년) .....	21
[표 3-01] 안전관리 관련주체별 역할 .....	28
[표 3-02] 유원시설업 허가 시 관련법규 및 해당부서 .....	29
[표 3-03] 정기·재검사 시 안전성검사 항목 .....	31
[표 3-04] 안전관리 실태점검 .....	33
[표 3-05] 검사팀별 안전검사 현황 .....	35
[표 3-06] 한국유원시설협회의 안전교육(2007년 기준) .....	36
[표 4-01] 임시영업 관리 문제점 .....	49
[표 4-02] 유원시설업 허가권자의 역할조정 .....	50
[표 4-03] 안전성검사 주기의 적정성 .....	51
[표 4-04] 유기사설(기구) 허가 전 안전검사 시 추가항목 .....	51
[표 4-05] 안전검사 강화 시 추가항목 .....	52
[표 4-06]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방안 .....	53
[표 4-07] 사업주 안전교육의 중요도 .....	53
[표 4-08] 사업주 안전교육 참여 개선방안 .....	54
[표 4-09]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의 중요성 .....	54
[표 4-10]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개선방안 .....	55
[표 4-11] 종사원 안전교육의 중요성 .....	55
[표 4-12] 종사원 안전교육 참여 개선방안 .....	56

[표 4-13] 사고 사업장 관리의 필요성 .....	56
[표 6-01] 주기단축의 장단점 .....	77

## < 그림 차례 >

[그림 1-01] 연구 수행체계 .....	5
[그림 2-01] 기구별 설치 현황 .....	19
[그림 3-01] 유원시설업 정기검사 및 재검사 절차 .....	32

백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수행과정

백지

# 제1장 연구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 및 이벤트 증가, 계절 여가의 장 활용 등에 따라 이동식 놀이기구 등의 임시영업 설치 및 이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영세한 사업규모의 임시영업은 집객 규모가 작아 국민관광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으나 대부분 입장료가 부과되지 않는 축제 이벤트 등에서 부가시설로 설치되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등 그 사업특성에 따라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2007년 부산 월드카니발에서의 인명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동식 놀이기구 등 임시영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대상 유원시설의 경우 안전성검사를 설치이후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이동식 놀이기구 등 임시영업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단위로 설치·영업되어 1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임시영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일본의 경우 2007년 5월, 스이타시(吹田市) 「엑스포랜드」 사고<sup>1)</sup> 발생 후 동력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 건축기준법 등의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검토 및 건축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궤도를 주행하는 것으로 비탈이 5도 이상인 유원시설에 대한 긴급점검과 함께 종업원의 안전교육 매뉴얼 작성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식 놀이기구 등 임시영업 허가·관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원시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1) 「엑스포랜드」 사고는 일본 유원지에서 처음 발생한 사망사고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수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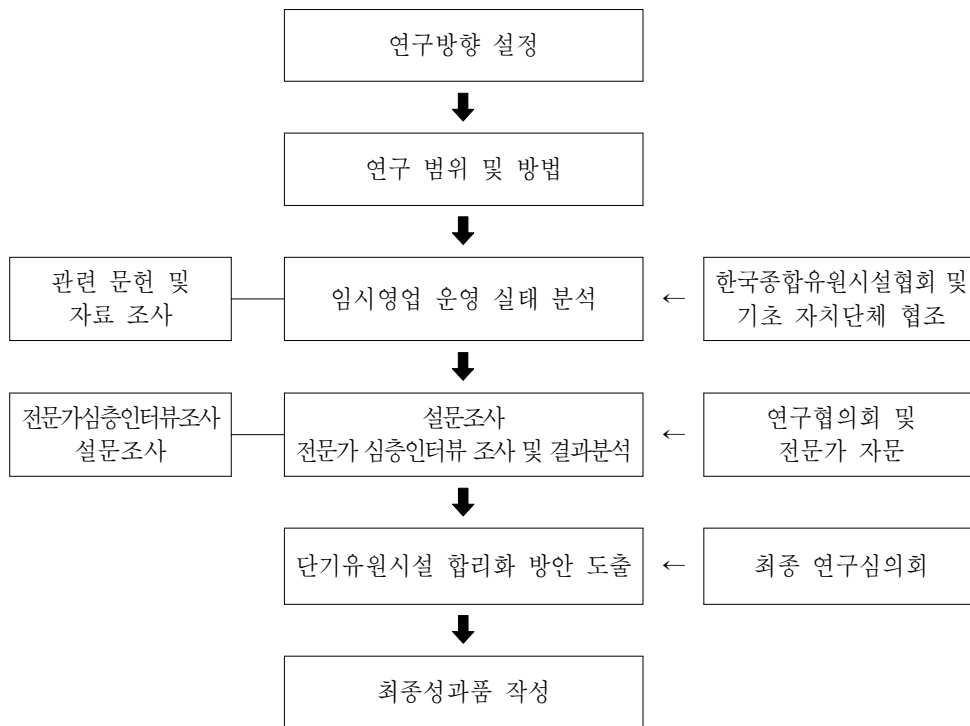
### 1. 연구의 방법

- 이동식 놀이기구 등 임시영업 합리화방안 연구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수행
-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진은 문헌조사, 관련 전문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국내외 연구자문 등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과를 활용
-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이동식 놀이기구 등 임시영업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 사례 등을 토대로 이동식 놀이기구 등 임시영업 허가·관리의 방향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관광진흥법 개정의 근거자료를 제시

### 2. 연구의 수행체계

- 본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제공한 최근 5년간 임시영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고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동협회의 최근 5년간 자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사고조사결과를 분석
- 전문가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유원시설협회 및 기초 자치단체의 협력 및 자문을 통하여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분석함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하되 한국유원시설협회,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백지

## 제2장

---

1. 임시영업 운영현황
2. 임시영업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백지

## 제2장 임시유원시설 영업 실태

### 제1절 용어 정의

#### 1. 유원시설

- 유원시설업에 설치·운영되는 놀이기구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서는 “유기시설”, “유기기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희시설”로 명명
- 유원시설업의 근거법인 관광진흥법에서는 허가 대상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무, 유기기구의 수에 따라 종합 유원시설업<sup>2)</sup>, 일반 유원시설업<sup>3)</sup>, 기타 유원시설업<sup>4)</sup>으로 분류
- 일반적으로 유기기구는 기구학적으로 운동하는 구조 또는 기계로 이루어진 시설물을 지칭하는 반면 유기시설은 건축물(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유기기구를 결합한 형태의 시설물을 일컬으나, 안전성검사에서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 유기기구는 기구학적으로 운동하는 구조 또는 기계로 이루어진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의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를 얻는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로서 고객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로 정의(문화체육관광부 제2003-18호 고시 3조)
-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희시설은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로서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기타 기계 조작 시설 등으로 구분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6종류 이상 설치, 운영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5항)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1종류 이상 설치, 운영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5항)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5항)

- 유원지의 시설 종류인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중 하나에 해당
- 일본의 경우 건축법에서 동력 놀이시설을 유희시설로 규정하고 한국과 같은 기구·시설에 구분은 실시하지 않음
- 미국은 한국과 같이 유기기구, 유기사설에 대하여 구분을 실시
  - 유기기구(Amusement Rides) : 승객들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해진 코스, 혹은 한정된 지역에서 승객들을 실어 나르거나 매달리게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모든 기계적 시설을 뜻함
  - 유기사설(Amusement Attractions) :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일체의 운송 기구의 도움 없이 주변을 걸어 다니거나 통과하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모든 건물 또는 건축물을 의미

## 2. 임시영업

- 우리나라에서는 유원시설에 대하여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 법적 구분은 없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카니발(Carnivals) 등의 평균개최기간 180일을 기준으로 영구적 놀이기구와 이동식 놀이기구로 구분
  - 영구적 놀이기구(Permanent Amusement Rides) : 180일 이상 한 장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 스릴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 탑승자를 운송하는 기계 장비, 수상 도구, 혹은 영구적 성격의 시설들의 조합
  - 이동식 놀이기구(Portable Amusement Rides) : 운송 장치에 장착되어 쉽게 이동 및 분해조립 가능한 유원시설
- 현 관광진흥법에서는 임시영업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유원시설 관련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임시영업을 1년 이하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설치·영업하는 시설로 정의
  - 경제경영학적 측면에서 “단기”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1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1년 이내의 회계 처리를 단기로 정의
  -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의 국채를 단기국채, 1년 미만의 대외자산 및 부채증감의 차액으로 국제수지표에 계상되는 수지를 단기자본균형이라 함

- 또한 임시영업은 이동식 유원시설과 이동식으로 개조된 유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임시영업은 후자인 이동식으로 개조된 유원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이동식 유원시설 :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 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는 유원시설로서 쉽게 분해·조립하여 이동·설치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원시설
  - 이동식으로 개조된 유원시설 : 영구 유원시설로 설계되고 설치된 유원시설을 분해·재조립하여 행사장이나 축제장 등의 이벤트 시 임시로 운영하는 유원시설
- 한국의 경우 임시영업과 그 외 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 기준, 방법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3. 유원시설 설치

- 유원시설업의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상에서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토지용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유원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법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등 다양한 법·제도에 근거하여 그 운용과정이 복잡함
- 건축법, 관광진흥법 상에는 유기기구의 설치·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유기기구의 설치지역은 상위법인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름
  - 또한 유원시설의 건축물, 공작물 여부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제72조)과 시행령(제118조)에 의해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시군 조례에 의해 결정됨

[표 2-1] 유원설치관련 법·제도

관련법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2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경우
	제77조제1항 (건축가능지역)	- 상업(중심, 일반, 근린, 유통)지역 - 유원시설업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종류) 제12호(위락시설) 라목(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규정 - 기반시설 안의 공원 시설에 포함될 경우

<표계속>

관련법		주요내용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의한 규칙	제57조 (유원지(오락휴양시설)결 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할 것</li> <li>- 아름다운 자연환경, 교통시설 연결 등 이용이 편리할 것</li> <li>- 규모는 1만㎡ 이상으로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li> </ul>
	제58조 (유원지 구조 및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편익 관리시설</li> </ul>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2조 (공원시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식동물원수족관, 박물관 등 교양시설</li> </ul>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권(어린이, 근린)공원, 주제(문화·체육·묘지 공원)</li> </ul>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 및 공원시설 의 계획과 작성, 인가, 공람, 고시,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 을 규정</li> </ul>
	시행규칙 제9조, 별표13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및 유원지의 정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구조, 설치기준 유희시설 에 관련된 사항 규정</li> </ul>
	시행규칙 제10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제시</li> </ul>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를 징수하는 유희시설(전력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 로 한함)의 경우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설치 가능</li> </ul>
건축법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의 심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 대상, 절차, 건축물의 유지, 관리, 구조 내력 등 허가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규정</li> </ul>
	시행령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 대상 및 절차,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li> </ul>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지, 관광단지 설치 시설 규정 (별표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원시설업 설치 가능(단, 관광단지에는 종합유원시설업)</li> </ul>

자료 : 관련 법규를 근거하여 재구성



## 제2절 임시영업 운영현황 분석

## 1. 분석개요

- 국내 임시영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기, 주체, 도입기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이와 함께 토지용도,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분석

[표 2-2] 조사 대상 개요

연도 (개소)	지역	행 사	운영일(기간)	업 체	도 입 시 설 명
2005년 (10개소)	인천	월드 카니발	43일 (04.21~06.02)	UK Funfairs	바이킹, 대관람차 외 28종
	광주	루나 페스티벌	10일 (09.24~10.03)	레스코라인	바이킹, 점핑스마일 외 4종
	경기	세계빛 엑스포	62일 (05.22~07.22)	짐바운스	트램카
		양평한화 콘도	61일 (06.26~08.25)	환타지랜드	미니바이킹, 돼지열차
		양평한화 콘도	76일 (12.11~02.24)	환타지랜드	미니바이킹, 돼지열차
	강원	용평리조트	102일 (05.22~08.31)	환타지랜드	미니바이킹, 회전목마
		용평리조트	87일 (12.04~02.28)	환타지랜드	바이킹
		정동진모래시계공원	25일 (08.03~08.27)	해돋이랜드	바이킹, 미니바이킹 외 2종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	24일 (09.30~10.23)	환타지랜드	바이킹, 타가다디스코
		충주세계무술축제	8일 (10.01~10.08)	환타지랜드	미니바이킹, 회전목마

&lt;표계속&gt;

연도 (개소)	지역	행 사	운영일(기간)	업 체	도 입 시 설 명
2006년 (12개소)	부산	부산벙스코	62일 (12.02~02.20)	런던카니발	롤러코스터, 뱀바카 외
	경기	양평한화콘도	19일 (07.17~08.04)	환타지랜드	미니 바이킹, 점핑라이더
	강원	낙산 해수욕장	39일 (07.13~08.20)	낙산랜드	바이킹, 타가다
		주문진 해수욕장	19일 (07.24~08.11)	한국레포츠 연맹	워터슬라이드 I, II
	충북	청원유채꽃 축제	23일 (04.22~05.14)	유채랜드	바이킹, 점핑스마일 외 8종
		충주세계 무술축제	9일 (09.30~10.08)	환타지랜드	미니바이킹, 미니아스트로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	53일 (07.10~08.31)	만리포비치 랜드	바이킹, 타가디스코
	전남	만성리 해수욕장	53일 (07.21~09.11)	한국레포츠 연맹	워터슬라이드 I, II
		명사십리 해수욕장	21일 (07.31~08.20)	한국레포츠 연맹	워터슬라이드 I, II
	경북	안동탈춤 페스티벌	10일 (09.29~10.08)	환타지랜드	미니바이킹
	경남	남해상주 해수욕장	55일 (07.02~08.20)	한국레포츠 연맹	워터슬라이드A- I, II
2007년 (10개소)	경남	진해 군항제	18일 (03.27~04.13)	그린랜드	미니바이킹, 다람쥐열차
	충북	청원유채꽃 축제	38일 (04.21~05.28)	대일기획	미니바이킹, 점핑스마일 외 4종
	강원	용평리조트	88일 (06.04~08.31)	환타지랜드	미니바이킹, 점프라이드 외 2 종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	56일 (07.02~08.26)	만리포비치 랜드	바이킹, 점핑스마일, 타가디 스코
	경기	글로벌카니발 (일산킨텍스)	44일 (07.06~08.19)	편앤쇼 엔터테인먼트	바이킹, 트위스터 외 9종
	부산	월드 카니발	38일 (07.25~08.31)	아이이엠지	자이언트 휠 외 29종
	제주	사랑과 빛 평화축제	33일 (07.14~08.15)	짐바운스	디스트렉터
	강원	주문진 해수욕장	33일 (07.30~08.31)	한국레포츠 연맹	워터슬라이드 I, II
	경북	경주 엑스포	50일 (09.07~10.26)	환타지랜드	바이킹, 타가디스코 외 2종
	경남	진주 유등축제	13일 (10.01~10.13)	환타지랜드	바이킹, 미니아스트로, 스윙거

자료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 자료 (2007.11)

## 2. 분석결과

### □ 임시영업 허가·설치 시기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평균 10.7개소/년의 임시영업이 운영
- 1월, 2월, 12월을 제외한 전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절기 휴가시기인 7,8월에 약 46%(32개소)의 높은 집중률을 보임
- 따라서 임시영업의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유원시설의 이동·설치가 빈번한 7,8월을 대비한 안전 및 안전지침 발송 등의 필요성이 고찰됨

[표 2-3] 월별 임시영업

월	업체 수	비율(%)
1월	—	—
2월	—	—
3월	1	2.4
4월	3	7.1
5월	2	4.8
6월	2	4.8
7월	12	28.6
8월	12	28.6
9월	5	11.9
10월	2	4.8
11월	—	—
12월	3	7.1
합계	42	100(근사치)

자료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2007)

#### □ 영업일수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임시영업시설의 영업기간은 2개월 미만인 77.4%로 조사됨
  - － 1개월 미만 38.7%,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38.7%,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9.4%인 것에 비하여 3개월 이상은 3.2%에 불과
- 최단 기간은 2005년 충주세계축제의 8일이며 최장 기간은 2005년 용평리조트의 102일로 조사되어 축제에 비하여 하절기 여름휴가시기에 장기간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2-4] 임시영업기간

기간	업체 수	비율(%)
1개월 미만	12	37.5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13	40.6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6	18.8
3개월 이상	1	3.1
합계	32	100

자료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 연구자 재구성

- 평균 영업일수의 경우 2005년 49.8일, 2006년 30.3일, 2007년 41.4일로 3년간 평균기간은 40.4일로 미국의 180일에 비해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됨
  - － 2006년 총 51개의 문화관광축제<sup>5)</sup>의 개최기간은 평균 7.3일

#### □ 토지용도

- 최근 3년간 임시영업이 설치된 장소는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됨
- 유원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지역, 제2종 지구 단위 지역, 개발진흥지구, ②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 관리 지역, ③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5) 문화체육관광부, 2007년

계획시설예정지, ④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설치·운영이 가능

【표 2-5】 지역별 축제·행사지역 토지용도

지역	행사명	토지용도	개최년도
인천	월드카니발	자연녹지지역	2005
부산	부산백스코	준공업지역 (건물용도 : 문화집회시설)	2006
	월드카니발	상업지역, 자연녹지	2007
광주	루나페스티벌	-	2005
경기	세계빛엑스포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5
	양평한화콘도	관리지역, 개발진흥기타지역	2005, 2006
	글로벌카니발 (일산킨텍스)	상업지역	2007
강원	용평리조트	관리지역, 개발진흥기타지역 (관광휴양개발지구)	2005, 2007
	정동진모래시계공원	-	2005
	낙산해수욕장	집단시설지구	2006
	주문진해수욕장	공유수면지역	2006, 2007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	자연녹지지역	2005
	충주세계무술축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5
	충주세계무술축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2006
	청원유채꽃축제	준공업지역	2006, 2007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상업지역	2006, 2007
전남	만성리해수욕장	자연녹지지역	2006
경북	명사십리해수욕장	공유수면지역	2006
	안동탈춤해수욕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6
	경주엑스포	계획관리지역	2007
경남	남해상주해수욕장	공유수면지역	2006
	진해군항제	상업지역	2007
	진주유등축제	-	2007
제주	사랑과 빛 평화축제	-	2007

주 : ' — '는 토지용도 조사 미응답 지역  
 자료 : 연구자 조사자료(2008. 2)

#### □ 운영주체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4개의 업체가 유원시설 임시영업을 위한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았으나 환타지랜드, 한국스포츠연맹, 짐바운스 외 11개 업체는 1회 운영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2007년 8월 현재 관광진흥법상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환타지랜드, 그린랜드 등 2개 업체이며<sup>6)</sup>,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즉, 임시영업의 대부분이 축제·행사 등의 특수를 겨냥한 일시적인 영업형태인 것으로 고찰됨

[표 2-6] 업체별 운영횟수

업체명	운영횟수	비율(%)
환타지랜드	12	37.5
한국레포츠연맹	6	18.8
짐바운스	2	6.3
만리포비치랜드	2	6.3
해돋이랜드	1	3.1
낙산랜드	1	3.1
레스코라인	1	3.1
대일기획	1	3.1
그린랜드	1	3.1
유채랜드	1	3.1
런던카니발	1	3.1
Fun&how	1	3.1
UK Funfair	1	3.1
IMEG	1	3.1
합계	32	100(근사치)

자료 : 1.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 자료 2007.11  
2. 각 행사담당자 설문 조사 2007.12

6)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07년 8월 기준)

## □ 도입 기종

- 3년간 운영된 임시영업은 축제·행사의 규모에 따라 도입 기종 수가 1종부터 30종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1개 소당 평균 3종의 유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됨
- － 기종별로 살펴보면 바이킹과 미니 바이킹이 각각 13회로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타가디스코, 워터슬라이드(각 10회), 점핑 스마일(5회) 순으로 비교적 이동설치가 용이한 회전형, 복합형 유기기구의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남



&lt; 바이킹 &gt;

&lt;타가다&gt;

&lt;워터슬라이드&gt;

[그림 2-1] 기구별 설치 현황

[표 2-7] 기구별 운영횟수

기구명	횟수	비율(%)
미니바이킹	13	20.6
바이킹	13	20.6
워터슬라이드	10	15.9
타가다	10	15.9
점핑스마일	5	7.9
미니아스트로	4	6.3
스윙거	3	4.8
웨이브스윙거	3	4.8
고스트트레인	2	3.2
합계	63	100

주 : 운영횟수 상위 10위 이상의 유원시설

자료 : 1.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 자료 2007.11

2. 각 행사담당자 설문 조사 2007.12

## 제3절 안전사고 실태

## 1. 조사 개요

- 유원시설의 안전사고 실태분석을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접수된 자료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료를 조사·분석
- 유원시설업의 상업적 특성에 따라 사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기에 사고를 마무리시키려는 경향이 높아 정확한 사고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움

[표 2-8] 안전사고 실태(2002년~2007년)

유기시설 명 (업체)	발생 일시	내 용	원 인	상해정도
개구리점프 (원천호수랜드)	2002년 8월	6명의 이용객이 개구리 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두 줄의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승용물이 약 2m 아래로 추락한 사고	시설물 관리미숙	경상6명
점핑스마일 (서울훼미리랜드)	2003년 5월	승용물 및 아암 연결 부위의 크랙으로 인한 절단으로 운행 중 (종료시점) 승용물이 기울어지며 플랫폼 위에 부딪쳐 승객(2명)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사고	시설물 결함	경상2명
타워라이드 (리버사이드파크)	2004년 3월	타워라이드에 15명이 탑승하여 운행 중 고장으로 스테이션에서 약 19.2m 상공에서 정지, 소방서 굴절차가 승객구조작업을 위해 지상 20m지점에서 굴절차 바스켓을 고정시키고 구조작업 중 승용물이 갑자기 하강하며 승용물 상단 안전망이 굴절차 바스켓 부분에 충격을 가하면서 바스켓이 뒤집혀 구조대원 1명과 탑승객 1명이 스테이션으로 추락한 사고	시설물 관리미숙	중상2명
회전관람차 (꿈돌이랜드)	2004년 4월	회전관람차의 승용물에 두 명의 어린이가 탑승하여 운행종료직전 스테이션 진입 전 약 13M 상공에서 탑승물에 매달려 있다가 8M 지점에서 추락하는 것을 아래에 있던 고객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접 몸으로 받아낸 사고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경상2명

&lt;표계속&gt;



유기시설 명 (업체)	발생 일시	내 용	원 인	상해정도
제트코스타 (롯데월드)	2006년 3월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인 피해자(남, 29세)가 아틀란티스 시설에 음주 상태에서 탑승하고 출발 전 안전바를 채우지 않고 운행 중 승용물에서 피해자가 이탈 석촌호수에 추락 익사한 사고	운행자 관리미숙 및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사망1명
스윙드롭 (꿈돌이랜드)	2006년 10월	안전장치가 미체결된 상태로 운행을 시작하여 2명의 이용객이 아래로 떨어진 사고	운행자 관리미숙	중상2명 과실치사 사법처리
매직배틀 (에버랜드)	2007년 1월	매직배틀에 탑승했던 피해자가 운행직전에 기구에서 내려 출구 쪽에 서있는 것을 운행자가 모르고 출발시켜 구조물사이에 협착된 사고임	운행자 관리미숙 및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사망1명
대관람차 (월드카니발)	2007년 8월	안전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였으며, 조립 시 잘못 끼워진 고정 핀이 돌출된 회전람 연결편에 끼여 승용물이 뒤집어 지면서 관람창이 탈락되면서 재해자들이 추락한 사고	시설물결함 및 운행자 관리미숙	사망5명

자료 : 1. 문화체육관광부(2000), 유원시설 안전기준 마련연구 결과 보고서  
2. [www.kinds.or.kr](http://www.kinds.or.kr) 2002년 ~ 2007년 놀이기구 관련자료 검색

【표 2-9】 한국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안전사고(2005년~2007년)

사고시설	발생일시	내 용	사고원인
송도월드카니발 미끄럼틀	2005년 6월	미끄럼틀을 타다가 속도가 빨라져 기구에 부딪혀 다침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회전목마	2005년 7월	7세 아이가 회전목마를 타고 혼자 내려오던 중 떨어져서 무릎 슬개골 파손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바디슬라이드	2005년 8월	안전요원 실수로 이용자 한 명이 내려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유도하여 충돌	운행자의 관리 미숙
트램폴린(방방)	2007년 6월	이용자 한명의 머리와 다른 한명의 앞니가 부딪쳐 앞니가 깨짐	운행자의 관리 미숙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놀이동산 놀이기구	2007년 1월	놀이기구 탑승 중 앞니 2개가 부러짐	운행자의 관리 미숙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자료 : 놀이기구 관련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한국소비자보호원 내부자료, 2005~2007년)

## 2. 조사 결과

- 유원시설 놀이기구와 관련한 사고는 크게 시설물 결함, 운행자 관리 미숙, 이용자 안전수칙 미수행 등 3가지로 분류됨
-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시설물 결함(시설물 관리미숙 포함)이 3건, 운행자 관리미숙이 1건,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가 1건, 운행자 관리미숙 및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시설물 결함 및 운행자 관리미숙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3건으로 나타남
- 유원시설의 사고발생률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전체 피해자 중 중상 4인(19%), 사망 7인(33%)으로 조사되어 발생건수에 비해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 이중 임시영업 관련 사고는 2007년 8월 발생한 ‘월드카니발 대관람차 사고’ 단 1건이라고는 하지만, 사망 5인의 대형 참사를 일으켜 임시영업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고원인은 안전관리 미숙(안전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시설물 결함(유원시설 이동설치 시 고정 핀이 잘못 조립됨)으로 밝혀져 안전검사와 관련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안전성 검사), 영도구청(행정절차), 사업주(안전관리 소홀) 등 안전성검사 관련자 모두에게 크고 작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고찰됨
  - 국내 안전관리자 채용시 형식적 이면계약 체결
  - 사고 사업장의 책임자, 놀이기구 조립책임자에 대해서는 금고형 및 집행유예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유원시설 놀이기구와 관련된 사고신고접수는 총 5건으로 운행자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3건의 사고가 발생되었고 나머지 2건의 사고는 운행자의 관리 미숙 및 이용객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
- 한국관광연구원(2000) 보고서에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종사원 자질향상과 함께 이용객의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사고업장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법 처벌 건이 스윙드롭(꿈돌이랜드) 1건, 형사 처벌건이 대관람차(월드카니발) 1건, 사고기구 운행정지 및 관련자 입건 건이 매직배틀(에버랜드) 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사고 2건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 에버랜드 메직배틀(2007.01) 사고의 경우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정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유원시설에 대한 운행정지 외 관련자를 입건함
- 국내 유원시설 놀이기구의 경우 사고가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후 사후 처리결과 보고 등에 대한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발생에 따른 처리결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확한 사고 파악을 통하여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백지

## 제3장

---

1. 안전관리 체계
2. 안전교육 체계

백지

## 제3장 임시영업 안전관리

### 제1절 안전관리

#### 1. 주체별 역할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사업주가 담당
- 안전성검사(실태점검 포함)와 인허가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기초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반면, 안전교육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사업주가 담당
- 주체별 주요 역할
  -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원시설에 관한 근거법·제도 제정·정비 등 유원시설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조정
  - － 기초 자치단체는 안전성검사를 제외한 인·허가 및 관리, 점검
  -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경우, 인·허가 시 안전성검사 담당, 공무원, 안전관리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담당,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실시 이외에도 유원시설업체 및 유기기구 제작 업체를 관리
  - － 유원시설업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일일안전점검 및 종사원 교육 등을 지도·감독

[표 3-1] 안전관리 관련주체별 역할

대 상	주체별 역할	근 거 법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법 제정,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위탁	관광진흥법 제133조
기초 자치단체	· 유원시설업의 허가	관광진흥법 제5조
	· 실태점검 시 관련부서와 합동점검 실시	—
한국종합 유원시설협회	· 허가 전 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실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6조
	· 사업주 안전관리교육, 담당공무원 교육	—
	· 유원시설업체 및 유기기구제작 업체 관리	—
유원시설사업주	· 안전관리자 배치, 일일안전점검, 운영요원지도감독 실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2조

## 2. 인·허가 절차 및 기간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담당하는 허가 전 안전성검사와 기초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인·허가 2단계 절차를 거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
  - － 짧게는 4일, 길게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 유원시설업 허가변경 신청 처리기간이 7일(관광진흥법 서식 16), 유원시설업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의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관광진흥법 서식 제11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관련 부서간의 협의 및 관련법 검토 등에 따라 장시간 소요
- 허가 전 안전성검사에서는 설계도에 대한 서류 검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인허가시에는 사업주 및 업체의 신용과 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 관련 내용을 검토
  - － 인허가 단계의 제출서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허가신청서, 신청인의 인적사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허가 전 안전성검사 시행 서류, 보험가입증명서,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표 3-2] 유원시설업 허가 시 관련법규 및 해당부서

항 목	내 용	근거법규	해당 부서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 유기사설의 안전성 · 안전관리자 배치 등 영업질서를 위한 사항	관광진흥법	문화 관광과
유원시설업 입지가능여부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구 내에서 입지가능 여부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업종별 설치가능 여부 등 검토 · 도시계획시설과 상충성 검토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과
건축물 설치관련	· 건축허가의 적합성 여부 · 건축제한 및 건축용도별 사용제한 등 검토	건축법	건축과
오수처리 계획검토	· 용도별, 면적별, 입지지역별에 맞는 오수처리계획 등 적합성 여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과
소방시설의 설치	·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에 관한 검토 및 도면작성 여부	소방법	소방서
상수도시설 설치	· 상수도 배수관 설치의 적정 여부 · 급수해당구역 여부 등	수도법	상수도 사업소

주 : 경기도 용인시 유원시설업 담당 공무원 전화면담을 통한 자료 연구자 재구성

### 3. 안전성검사

- 안전성검사는 허가 전 안전성검사, 정기 안전성검사, 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 1) 허가 전 안전성검사

- 영업 허가 전 신규로 도입하거나 일정 허가 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유기기구를 대상으로 실시
- 사업주가 유원시설 설치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허가 전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검사완료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신청업체 및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 통보
- 1개 팀당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검사팀이 설계도면 등의 서류 검사와 조립과정 검사, 사전 운행검사로 이루어지는 현장검사를 실시
  - 서류검사 : 하중강도, 구조 안전성, 구조계산서, 전기설비 등 성 4개 항목에 대한 설계검사 실시<sup>7)</sup>

- 현장검사 : 검사가 필요한 적정 시기에 검사반이 출동하여 검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부분별 조립상태 및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
- 허가 전 안전성검사는 자료검토 등을 감안하여 최소 2일에서 약 30일 소요
- 허가 전 안전성검사 소요시간은 유기사설 종류 및 기종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0일 이상의 검사기간이 소요

## 2) 정기 안전성검사

- 허가 전 안전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현장검사
  - 정기 안전성검사 기준일은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함
  - 기존 업체의 경우 유기기구조사서를 제출, 정기 안전성검사를 처음 받거나 대표자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
- 현장검사는 관광진흥법([표 3-4] 참조)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해당항목의 세부 안전성검사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
  - 안전성 검사 기준은 KS(한국), ASTM(미국), DIN(독일), JIS(일본) 등에 연관된 기준을 적용
- 정기검사는 현장위주의 검사로 허가 전 안전성검사 이후 구조변경, 강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허가전 안전성검사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

---

7) 설계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003-18호 고시 3조에 제시되어 있는 각 항목별 기준을 따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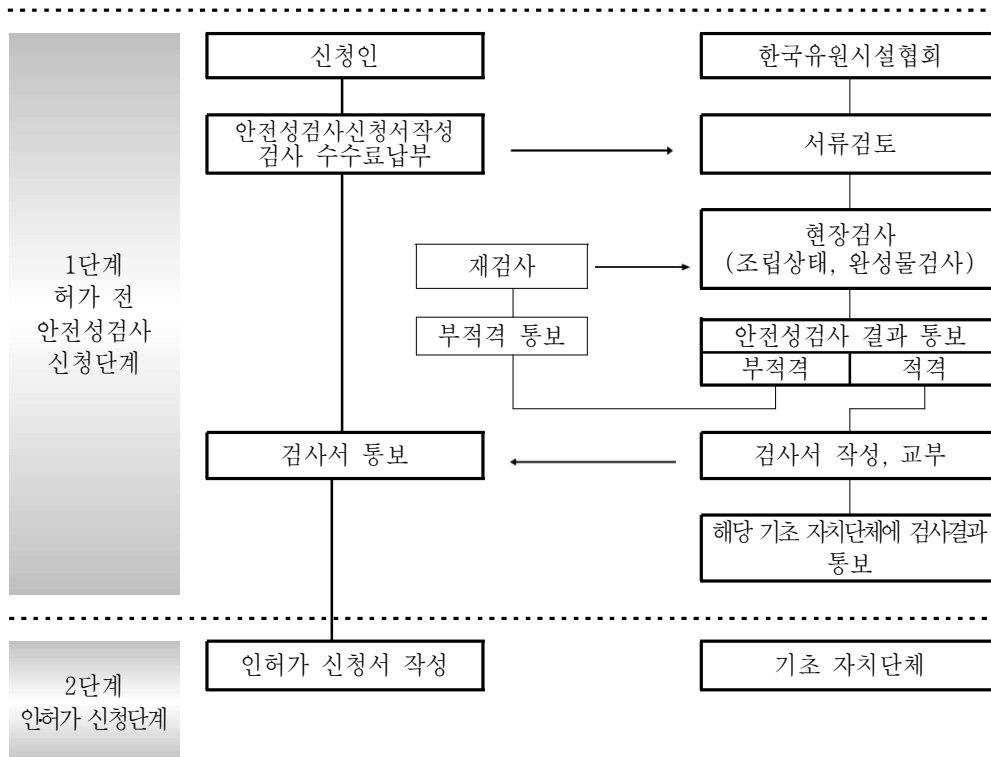
[표 3-3] 정가·재검사 시 안전성검사 항목

검사항목	세부 항목	검사항목	세부 항목
기초 및 앵커볼트	1. 지반상태	유압, 공압, 수압 장치	1. 유압장치
	2. 기초		2. 공압장치
	3. 앵커볼트		3. 수압장치
	4. 지주, 구조부재		4. 밸브 및 배관장치
	5. 보조부재	제동장치	1. 브레이크장치
	6. 체결부		2. 완충장치
승용물 장치	1. 승용물구조	물놀이장치	1. 슬라이드
	2. 승용물 체결부		2. 착지폴
	3. 승용물 안전장치		3. 파도폴
	4. 승용물 기타장치		4. 유수폴
궤도, 수로, 주로 장치	1. 궤도, 수로, 주로		5. 급수장치
	2. 받침지주		6. 부력기구
	3. 역주행방지장치		7. 신호장치
구동장치	1. 감속기	전기장치	1. 전동기 기동전류 및 운전전류
	2. 축기계요소		2. 배전설비및계기류
	3. 전동기		3. 접지 및 피뢰설비
	4. 클러치		4. 조명 및 장식장치
	5. 축 및 베어링		5. 신호 및 제어장치
	6. 기어	운전조작장치	1. 조작장치
	7. 체인 및 스프로킷		2. 비상조작장치
	8. 벨트 및 벨트풀리	기타시설	1. 승강장
	9. 로프		2. 안전울타리
	10. 컨베이어장치		3. 비상출구
	11. 차륜장치		4. 안전유도표시
			5. 풍속계
			6. 안전점검판
			7. 기타유기시설

자료 : 관광진흥법 별표 11(대항목 10개, 중항목 51개, 소항목 249개)

### 3) 재검사

- 정기안전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 또는 3개월 이상 운영을 정지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로 사고발생 즉시 사업주가 신청함
- 재검사는 정기 안전성검사와 동일한 절차, 검사항목으로 실시



자료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 교육자료(2007) 연구자 재구성

[그림 3-1] 유원시설업 정기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 절차

## 4) 실태점검

- 안전성검사와는 달리 실태점검은 매년 2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기술전문가, 기초 자치단체의 문화관광부와 재난관리 부서 직원이 합동으로 실시
  - － 실태 점검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방재청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표본점검을 실시
- 실태 점검 시 각 지자체 문화관광부서는 영업허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검토하고, 재난관리부서는 일반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유기사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표 3-4] 안전관리 실태점검

구 분	내 용
시기	연 2회 / 2주간 성수기 이전 실시 (3월 말 2주간/ 9월 말 2주간)
대상	전국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체
구성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자치단체 문화관광 부서 : 영업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li> <li>· 기초 자치단체 재난관리 부서 : 일반시설물 관리 실태</li> <li>·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유기사설 안전점검 등</li> </ul>

주 : 2006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06) 연구자 재구성

#### 4.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가. 설립 목적 및 성격

- 1985년 2월, 유원시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유원시설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검사,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시책 구현을 위하여 설립된 유원시설 사업자 단체임

##### 나. 주요 업무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위탁업무
- 공무원, 안전관리자 대상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 국내·외 산업정보 수집 및 정보 교환
- 유원시설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구조 진단, 안전성평가 및 의견수렴

##### 다. 회원 가입현황

- 2007년 2월 현재 전체 유원시설업(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 235개 중 한국종합유원시설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 있는 업체는 약 58%에 불과하여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과 실행력에 한계가 있음

##### 라. 예산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유원시설 검사비가 75% 이상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고, 회비, 비대상확인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의 경우 2%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지출 내역 또한 검사비(40%)와 인건비(30%) 항목이 가장 높고 교육부문은 0.7%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이러한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주요 역할은 안전성검사임을 알 수 있음

## 마. 검사팀 구성

- 허가 전 안전성검사의 경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 6개의 검사팀이 주축이 되어 검사를 실시
  - 검사팀은 담당지역 팀장의 연고지와 접근성,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원시설 기종 수를 고려하여 1인의 팀장과 3인 이상의 검사반원 등 총 4인 이상을 구성. 각 팀장은 기술위원회에 소속
- 그러나, 검사책임자가 1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해당 검사 책임자 사정으로 지원요청할 경우 타 검사책임자가 검사를 시행
  - 또한 검사 팀장이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검사팀장의 활동지역과 검사지역이 원거리일 경우 이동에 따른 시간소요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
  - 2007년 안전사고가 발생한 월드 카니발의 경우 담당 팀장의 부재로 타 지역 검사 책임자를 추가 투입

[표 3-5] 검사팀별 안전검사 현황

구 분	책 임 지 역	업체 수 / 기구 수	검사책임자		정기검사 평균 소요일수
			거주지역	전공	
제1팀	서울, 경기북부, 제주	26개 업체 / 184개 기구	서울	기계기술사	30일
제2팀	경기남부	11개 업체 / 154개 기구	서울	공학박사, 대학교수	20일
제3팀	인천, 대전, 강원도	23개 업체 / 206개 기구	서울	기계기술사	35일
제4팀	대구, 경북, 충북	25개 업체 / 172개 기구	대구	공학박사, 대학교수	26일
제5팀	부산, 울산, 경남	27개 업체 / 175개 기구	부산	공학박사, 대학교수	28일
제6팀	광주, 전남, 전북, 충남	30개 업체 / 199개 기구	전주	공학박사, 대학교수	32일

자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2007)

## 제2절 안전교육

- 담당 공무원, 사업주,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종업원 교육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2007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안전교육의 경우 사업주 관리(연 1회), 담당공무원 안전관리(연 1회), 안전관리자 교육(연 2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sup>8)</sup>(연 1회) 등 기본적인 교육만을 시행

[표 3-6] 한국유원시설협회의 안전교육(2007년 기준)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강사	참석인원
유원시설업 사업주 안전교육	1박2일	· 유원산업 소개 · 유원시설업 관계법령 설명 · 유기기구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사례교육 · 유기기구 안전장치 개선사례 · 유원시설 안전관리 및 운전자 운전관리요령 · 유기기구 보존실무 및 사업주 안전점검	8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유원시설협회, 협회자율지도원, 대학교수)	45개 업체 53명 참석
유원시설 담당공무원 안전교육	2박3일	· 관광산업 개발방안 · 유원산업 및 유기기구 소개 · 유원시설업 관계법령 · 유기기구 사고사례 분석 · 안전관리 지도요령 및 안전점검 실무요령 · 기계 및 전기 안전관리	10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유원시설협회, 협회자율지도원, 대학교수)	55명 참석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교육	1차 : 2박3일	· 유원시설업 관계법령 · 안전관리자 임무 및 역할 · 기계기초 및 설계도면의 이해 · 유기기구 및 물놀이기구 안전점검현장실무 · 사고사례분석 · 사고처리절차 및 대응방법 · 응급환자발생 조치요령 · 전기기초 및 실무사례	13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유원시설협회, 협회자율지도원, 소방서, 대학교수)	1차 <sup>9)</sup> 66개 업체 77명 참석

&lt;표계속&gt;

8)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대상 :

-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 일반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12>에 의해 안전관리자로 임무 수행자 및 예정자 또는 기타분야 희망자

9) 의무교육 참석자는 24명 대상자 중 79.2%(19명)만 참석



교육명	교육 기간	교육내용	강사	참석 인원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교육	2차 : 2박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원시설업 관계법령</li> <li>· 안전관리자 임무 및 역할</li> <li>· 기계기초 및 설계도면의 이해</li> <li>· 유기기구 및 물놀이기구 안전점검현장실무</li> <li>· 사고사례분석</li> <li>· 사고처리절차 및 대응방법</li> <li>· 응급환자발생 조치요령</li> <li>· 전기기초 및 실무사례</li> </ul>	13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유원시설협회, 협회 자율지도원, 소방서, 대학교수)	2차10) 44개 업체 52명 참석
일반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4박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원시설업 관계법령</li> <li>· 안전관리자 임무 및 역할</li> <li>· 유기기구 매커니즘</li> <li>· 비파괴 실무사례</li> <li>· 전기기초이론</li> <li>· 수배전설비/전기도면/전기설비의 이해</li> <li>· 유공압/용접 실무사례</li> <li>· 사고사례 분석</li> </ul>	12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유원시설협회, 협회 자율지도원, 소방서, 전기설비업체, 대학교수)	13개 업체 14명 참석

자료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내부자료(2007)

#### 가. 공무원 교육

- 담당 공무원 안전교육은 법적의무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
  - 2007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주최한 전국 시도, 시·군·구 유원시설업 담당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에 참여한 공무원 수는 55명에 불과
- 공무원 안전교육은 3일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유원시설협회, 협회자율지도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중심으로 유원시설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수시 검사 등 유원시설업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
  - 관광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부터 유원산업 및 유기기구 소개, 유원시설업 관계법령, 유기기구 사고사례 분석, 안전관리 지도요령 및 안전점검 실무요령 등을 다루어 효율적인 업무처리 수행을 돕고자 함
- 관광 담당 공무원의 경우 자리이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유원시설업의 특성상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함

10) 의무교육 참석자는 22명 대상자 중 59.1%(13명)만 참석

## 나. 사업주 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배치와 일일점검, 종사원의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업주 교육 또한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
  - 2007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사업주 안전교육에 참석한 사업주는 전국 235개 업체 중 45개 업체, 53인에 불과
- 사업주 안전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협회자율지도원, 대학교수로 구성된 강사를 주축으로 2일 동안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교육으로 진행
  - 유원시설업 관계법령, 유기기구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사례, 유기기구 안전장치 개선사례, 유원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자 안전관리요령, 유기기구 보존실무 및 사업주 안전점검 등을 교육

###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사업장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나 재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증가 및 변화하는 유원시설 환경적응을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유원시설협회, 협회자율지도원, 대학교수 외에 소방서 소속의 관련 등으로 구성된 강사를 주축으로 3일에 걸쳐 실시
  - 유원시설업 관계법령, 안전관리자 임무 및 역할, 기계기초 및 설계도면의 이해, 유기기구 및 물놀이기구 안전점검 현장실무, 사고사례분석, 사고처리절차 및 대응방법, 응급환자발생 조치요령, 전기기초 및 실무사례 등의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
- 유원시설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는 물론 공무원,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질적 향상이 요구되나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교육인력 및 관련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안전성 검사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전체 수입의 75.1%, 지출의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일부 제외) 교육 관련 수입은 2%, 지출은 0.7%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으로 소액지원 되어 활발한 교육활동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종사원 안전교육

- 종사원 안전교육은 유원시설업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시영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종사원 교육수준은 매우 열악함
- 유원시설업계의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사업장 자체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일정을 계획하여 종사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한국관광연구원, 2000),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업장의 경우 열악한 환경으로 자체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시행되더라도 교육수준이 매우 낮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

백지

## 제4장 전문가 조사·분석

---

1.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2. 전문가 설문조사

백지

## 제4장 전문가 의견 조사

### 제1절 전문가 심층면접

#### 1. 조사개요

##### 가. 조사목적

- 유원시설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심층면접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이동식 놀이기구 등 임시영업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나. 조사대상

- 심층면접 조사는 임시영업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1인, 학계 1인, 업체 1인 등 6인으로 구성
  - － 공무원 : 중앙부처 1인, 기초 자치단체 1인
  - － 협회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1인
  - － 학계 : 기계공학 전문가 1인
  - － 업체 : 유원시설업<sup>11)</sup> 1인, 임시영업업 1인

##### 다. 조사방법

- 각 대상자에게는 인터뷰 실시 일주일 전에 질문항목을 송부
- 인터뷰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록 및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

11) 2006년 기준, 유원시설업 상위 10위 업체 중 1개소를 선정

## 라. 조사내용

- 이동식 놀이기구 등 임시영업에 대하여 현 유원시설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조사
- 개선방안은 ①유원시설업 허가권자의 역할, ②안전성검사 강화, ③사업장 관리 강화, ④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⑤기타로 구분하여 실시

## 2. 조사결과분석

### 가. 문제점

- 담당 공무원의 관련 지식 및 경험 부족
  - 기초 자치단체 행정 구역 내 유원시설이 입지하지 않은 경우 유원시설 인·허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경우도 있음
  - 유원시설업의 특성상 허가 전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 토지용도의 적합성 등에 대한 해석이 어려움에 따라 관련법 검토 및 관련 부서간의 협의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간 내의 업무처리가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원시설업이 기초 자치단체 관광부서의 주요 사안이 아님에 따라 교육 등의 참여의식이 매우 저조

#### < 심층면접 내용 >

##### ■ 현행 인·허가의 문제점

-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타 업무량이 많아 실제적 유원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조차 어려움
- 기초 자치단체는 인·허가 시 안전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지역 행사를 유치하고 잘 치러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함
- 유·기·시설의 정의와 범주 혼란으로 인하여 안전성검사 대상 유무에 대한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 결격자 파악, 보험가입 증서 확인, 건축물 내 유원시설업 인·허가 사항 등 관련법 및 제도 확인 조차 어려운 실정
- 허가대상 지역 토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고 안전교육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 무허가 영업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함



- 안전성검사 시스템 미흡
  - 임시영업은 정기검사 및 실태점검에 포함되지 않고 허가 전 안전성검사만 거침
  - 인·허가 시 필요한 서류 준비 및 기초 자치단체 내 부서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설치기간이 짧은 유원시설의 경우 부설시공의 우려가 있음
  - 특히 설치기간이 짧은 유기기구의 경우 사업주가 설치완료 후 안전성검사를 신청함으로써 내부 부품 검사에는 한계가 있음
  - 기계설계, 제어, 진동, 역학 관련 설계관리 등의 공학적 지식을 보유한 안전 검사자가 원거리를 이동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비용 낭비는 물론 졸속 검사의 우려가 있음

< 심층면접 내용 >

■ 임시영업 검사 시 문제점

-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하고 주변 시설(방송시설, 구급약품 등)에 대한 검사는 행정공무원이 육안검사로 실시
- 또한 콘크리트 등의 기초공사 없이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목 공학적 안전성검토가 요구되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는 자체적 판단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발생

- 안전교육 미흡
  - 사업주, 공무원의 경우 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
  -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교재의 보완이 필요하고 각 분야별 교육 담당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
  - 안전관리자에 대한 재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영업실적 상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종사원 안전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원시설 안전사고는 기구의 시스템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운행방법 미숙지 등의 이용객 안전의식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용자 안전 의식 계도도 필요

< 심층면접 내용 >

■ 안전교육의 문제점

- 현행 안전교육은 업체 중심, 안전관리자 위주로 실시하고 있음
- 유원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자료 부실, 단순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의 실제 전문가 교육 등과 같은 심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현행 사업주 안전교육의 경우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음. 안전관리자, 운영자 및 사업주가 공학적,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안전관리자의 부족 및 기계의 시스템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보다는 안전교육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교육이 가장 절실

- 안전사고 발생 업장에 대한 규제 방안이 미흡
  - －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상시 지도·감독을 통해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
  - －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 심층면접 내용 >

■ 사고 사업장 관리

- 지금까지 안전사고 방지책은 사후관리측면이 강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현재 유원시설업 지도감독은 해당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지도감독 일지 작성, 현장 방문 등의 형태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전부임. 기계적 결함이나 사업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나. 개선방안

- 유원시설업 담당 공무원의 안전교육 제도 정착
  - － 이와 함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허가 및 안전운영·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전관리 행정능력을 제고
- 허가 전 안전성검사 강화
  - － 정기 안전성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기보다는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강화

- 인허가 신청 시 해당 유원시설의 사고이력, 관련 담당자 교육이행 실적 등의 서류검사를 강화
- 시험운행 검사 시 실제상황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전부하 시험(Full load Test), 인터록 테스트 (Inter Lock Test) 등을 지속 실시
- 사고 위험이 높은 유기사설(회전형, 주행형 유기사설)의 개별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세분화된 검사 기준을 마련
- 권역별 안전검사 체계구축
  - 권역별 안전검사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유기사설 안전관리를 도모
- 안전관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관광 공무원의 경우 기술적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 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이 안전관리를 요청할 시 경상북도의 재난관리과, 민방위과 등의 관련부서가 지원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교육 커리큘럼 개설을 통해 수준 높은 안전교육을 시행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교육기능 강화 및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과정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전문기관(공단), 지역 내 안전관리 단체(소방서 등)와 협조하여 교육 방법, 내용의 다양화 시도
  - 이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사고 대처 방법·실습 등과 같이 현장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중심의 커리큘럼 구성
- 안전검사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및 제도 보완
  - 사업주, 안전관리자 교육 의무화
  - 안전관리자의 경우 기계, 전기 등 세분화된 분야별 교육을 상세히 시행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도모
  - 안전교육 시 유기기구별 안전사고 발생 유형, 사고 발생 시 수습 대책 방안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제고
  - 임시영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종사원의 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또한 안전수칙, 이용객의 안전 이용 유도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체적인 교육 매뉴얼 개발 및 이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필요
- 사고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자 안전교육 강화 및 인식 개선

- 수시 점검 시 안전검사가 요구되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사업주 스스로가 안전검사기관(현 한국유원시설협회)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적극적인 안전관리 방안(안) 모색
  -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원시설 관리
  - 지역 소방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관할 자치단체, 지역 경찰 등이 참여하는 '안전구조대'를 결성하여 운영
- 사고가 반복 발생한 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안전관리를 성실히 이행한 무사고 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 부여

##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 가. 조사목적

- 심층면접에 의한 조사 응답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sup>12)</sup>을 지니고 있음. 이에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량적 조사(설문조사)를 실시

#### 나. 조사방법

- 전문가 설문조사는 2008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10일 동안 유원시설업 담당 공무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관련 연구원 및 대학, 유원시설업 종사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5부를 회수
- 이와 같이 수집된 응답자료에 대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임시영업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도출

12) 한호택, 「사회과학에 있어서 질적분석방법과 양적분석방법의 비교」, 인하대 석사학위 논문(1995)

## 2. 조사결과 분석

### 가. 임시영업 안전관리의 문제점

- 임시영업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안전검사체계 부적절, 사고 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관리 미흡, 안전관리와 관련한 검사 주기, 안전관리 전문인력 부족, 시설이용객들의 안전의식 부족 항목으로 설문을 실시

【표 4-1】 임시영업 관리 문제점

내용	빈도	비율(%)
안전검사 항목 체계 부적절	10	24.0
사고 유원시설(업)에 대한 제재 미흡	7	17.0
담당 지자체(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의 허가·관리 미흡	6	14.0
안전관리와 관련한 검사주기가 길어 대다수 이동식 놀이기구가 정기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	4	10.0
유원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 인력 부족	6	14
시설이용객들의 안전의식 부족	9	21
합 계	42	100

- 그 결과, 임시영업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안전검사 체계 부적절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객의 안전의식 부족 21%, 사고업장에 대한 제재 미흡 17%, 담당 지자체의 허가·관리 미흡 14%순이었으며, 정기검사주기의 부적절은 10%로 가장 낮게 조사됨
- 기타 의견으로는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 종사자의 책임 의식 부족,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이 제시됨

## 나. 유원시설업 설치 허가권자 역할

- 유원시설 인·허가 시 임시영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허가권자인 시·군·구의 역할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질문
- 조사결과, 현행대로 기초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6.0%, 9인)는 의견과 함께 기초 자치단체장이 허가권을 가지되 광역 자치단체장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신중히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6.0%, 9인)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허가권자 변경에 대해서는 8%, 12%로 매우 낮게 조사됨
- － 또한 기존의 기초 자치단체(시·군·구)가 허가권을 가지되 상위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절차의 장기화,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다와 함께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행정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표 4-2] 유원시설업 허가권자의 역할조정

구분	빈도(명)	비율(%)
현행대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행한다	9	36.0
광역 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 등)이 시행한다.	3	1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한다	2	8.0
기초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등)이 허가권을 가지되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등)과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신중한 설치·운영이 되도록 유도한다.	9	36.0
기초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등)이 허가권을 가지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신중한 설치·운영이 되도록 유도한다.	2	8.0
합 계	25	100

### 다.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 현행 안전성검사 주기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적정, 24%가 보통, 28%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함

[표 4-3] 안전성검사 주기의 적정성

구분	매우 적정하지 않음	적정하지 않음	보통임	적정함	매우 적정함	합계
빈도(명)	2	5	6	8	4	25
비율(%)	8.0	20.0	24.0	32.0	16.0	100

- 안전검사주기를 단축할 경우 적정주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12개월에 1회(48.0%, 12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 1회(36%, 9인), 3개월에 1회(16%, 4인) 순으로 조사됨
  - 그러나, 실제 임시영업의 평균 영업기간 40.4일일을 고려할 때 6개월 또는 3개월 주기는 한국 실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고찰됨
- 허가 전 안전성검사 시 추가되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유원시설의 사고이력 및 안전교육 관련 계획서 등의 서류검사(44.1%)와 사전 운행검사 강화(3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유원시설 안전검사 항목 및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임

[표 4-4] 유원시설(기구) 허가 전 안전성검사 시 추가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유원시설의 사고 및 시설관리기록, 시설 안전교육 기록 등에 대한 서류검사	15	44.1
유원시설 사전 운행검사 강화	12	35.3
유원시설 안전검사 항목 확대	5	14.7
유원시설 안전검사 대상 확대	2	5.9
합 계	34	100

주 : 복수응답

- 임시영업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화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시설 사업주 교육이 21.7%(13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관리자 교육(20%, 12인) 및 검사 전문인력 양성(20%, 12인), 시설운행자 교육(18.3%, 11인)등으로 조사되어 거의 모든 응답자가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인력 확보, 교육교재 개발 및 사업주,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영세업체 종업원 교육을 위한 직접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4-5] 안전성검사 강화 시 추가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해당시설의 사업주 교육	13	21.7
해당시설의 안전관리자 교육	12	20.0
해당시설의 시설운행자 교육	11	18.3
검사 전문인력 양성	12	20.0
안전성검사 항목 추가	7	11.7
안전성검사 대상 확대	5	8.3
합 계	60	100

주 : 복수응답

-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전담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4.0%(11인)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시·도별 안전관리 인력풀 구성(24.0%, 6인), 관련 대학·연구소·정부기관과의 연계 체계구축 (16.0%, 4인), 유원시설 안전관리 자격시험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12.0%, 3인)의 순으로 조사됨



[표 4-6]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시·도별 안전관리가 가능한 인력풀을 작성하여 전문인력 관리	6	24.0
위탁기관(현 한국중합유원시설협회)의 전담인력 양성	11	44.0
관련대학, 연구소, 정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구축	4	16.0
「유원시설 안전관리 자격」 시험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3	12.0
기타	1	4.0
합 계	25	100

#### 라. 안전관리

- 사업주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매우 중요 52%(13인), 중요 32.0%(8인), 보통 12.0%(3인)로 나타났으며, 단 1인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조사되어 거의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사업주 안전교육의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빈도(명)	—	1	3	8	13	25
비율(%)	—	4.0	12.0	32.0	52.0	100

- 사업주의 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안전교육의 법적 의무화(40.0%, 18인), 워크숍·현장시찰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실시(28.9%, 13인)가 높게 나타남

[표 4-8] 사업주 안전교육 참여 개선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현행대로 시행한다	7	15.6
사업주 안전교육을 법적 의무화한다	18	40.0
안전교육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7	15.6
워크샵, 현지시찰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3	28.9
기타	—	—
합계	45	100

주 : 1) 복수응답

2) 비율합계는 근사치임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무하게 나타나는 등 모든 응답자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9]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의 중요성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빈도(명)	—	—	1	7	17	25
비율(%)	—	—	4.0	28.0	68.0	100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시 재교육 의무화(45.8%, 22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워크샵, 현장시찰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실시(27.1%, 13인), 한국종합유원시설 협회와 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우수 교육인력 확보(18.8%, 9인) 순으로 나타남

[표 4-10]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개선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현행대로 시행한다	—	—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일정기간 경과 시 재교육을 의무화한다.	22	45.8
현 교육기관(한국중합유원시설협회)과 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교육전수 인력을 확보한다.	9	18.8
워크숍, 현장시찰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주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3	27.1
‘안전교육’이 아닌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양산한다.	4	8.3
기타	—	—
합 계	48	100

주 : 복수응답

- 종사원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종사원 안전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1] 종사원 안전교육의 중요성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빈도(명)	—	—	—	7	18	25
비율(%)	—	—	—	28.0	72.0	100

- 종사원 안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종사원 안전교육 매뉴얼 제작·지원하여 영세 사업주의 교육을 지원(42.9%, 18인), 사업주의 자체교육과 함께 연 1회 안전교육기관(안) 교육을 병행(35.7%, 15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원 교육실적이 양호한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16.7%(7인)이 응답

[표 4-12] 종사원 안전교육 참여 개선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현행대로 시행한다.	1	2.4
종사원 안전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영세 사업주의교육을 돕는다.	18	42.9
사업주의 자체교육과 함께 연 1회 안전교육기관(안) 교육을 병행하여 질적 수준을 고양한다.	15	35.7
종사원 교육 실적이 양호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	16.7
기타	1	2.4
합 계	42	100

주 1) 복수응답

2) 비율합계는 근사치 임

#### 마. 사고 사업장 관리

- 사고 사업장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무하게 나타나는 등 모든 응답자가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고 사업장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 및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분 강화(3인), 일정기간의 영업정지(3인) 등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함께 무사고 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5인)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명확한 사고 실태 조사 및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4-13] 사고 사업장 관리의 필요성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빈도(명)	—	—	2	13	10	25
비율(%)	—	—	8.2	52.0	40.0	100

주 : 1) 복수응답

2) 비율합계는 근사치 임

## 제5장

1. 종합분석
2. 시사점

백지

## 제5장 종합분석 및 시사점

### 제1절 종합분석

#### 1. 임시영업의 문제점

##### □ 관련주체별 임시영업의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임시영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주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허가권자인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축제·이벤트 유치 과열에 따라 부가적인 시설로 도입되는 유원시설에 대한 허가·관리가 느슨하며, 특히 담당 공무원의 전문 지식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관리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불법으로 운행되는 유기기구에 대한 단속시스템 결여
- 안전성검사와 관련 주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유원시설협회의 경우 유원시설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 담당 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안전성검사와 함께 교육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고찰됨
  - 협회의 주요사업은 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 외에도 국내외 산업정보 수집 및 정보교환, 유원시설업에 대한 자율지도 운용, 유원시설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대정부 건의 등이나, 현재는 안전성 검사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임시영업 사업주는 대부분 일회성 업체임에 따라 현 시점에서 자발적인 종사원 교육, 일일점검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임시영업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육과 일일점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 안전성검사의 시스템 미흡

- 임시영업은 평균 40.4일로 정기검사 및 실태점검에 포함되지 않고 허가

전 안전성검사에만 해당

- 인·허가 시 복잡한 토지용도에 따른 해석이 어려우며 기초 자치단체 내 부서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는 기계의 경우 사고력 파악 및 보험증서 판독 등이 어려워 안전성검사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높음
- 설치기간이 짧은 유기기구의 경우 사업주가 설치완료후 안전성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내부 부품 검사에 한계가 있음
- 안전검사자가 원거리를 이동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비용 낭비의 우려가 높음

□ 안전교육 미비

-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업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한국유원시설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공무원, 사업주 안전교육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참여율이 매우 저조
-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능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됨에 따라 고도의 기술과 안전의식이 요구되나 현행 제도상에는 ‘작업장 배치일 6개월 내 1회 교육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유원시설업자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세한 한국 유원시설 업계 현실상 안전성확보를 위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시설을 조작하는 운영자와 관련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나 국민의 안전의식 계도활동은 미흡한 실정



## 제2절 시사점

## □ 관련 주체 간 역할성 강화

- 담당 공무원의 행정업무 능력 증대를 위해 임시영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교육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을 통한 허가관리 등의 행정능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6.3%(19인)로 조사
- 담당 공무원은 전문교육 통해 관련 업무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단축 및 경험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영업업의 안전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함
  - 일부 제출 서류 중 관련 법규 적용의 모호함 및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전문교육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함
- 안전성검사 및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안전전문인력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차원에서의 안전전문인력 확보는 일일점검 및 종사원 교육 등을 직접 시행하는 임시영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위탁기관(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이 전담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1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교육 시행 시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8.8%(9인)로 나타남
- 종사원교육과 일일안전성검사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종사원교육 관련 매뉴얼(안) 및 표준화된 안전점검 매뉴얼(안)을 제작하여 사업주 스스로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

## □ 임시영업에 대한 안전성검사 실효성 확보

- 임시영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성검사 주기 단축보다는 허가 전 안전성검사 강화를 통해 임시영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문가 조사 결과 6개월의 1회(36%), 3개월의 1회(16%) 등 안전성검사 기간 단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임시영업의 영업기간이 평균 40.4일임을 고려할 때 안전성검사 단축은 무의미한 것으로 고찰됨

- 안전성검사 주기단축도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사업주, 안전관리자, 종사원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 개선을 통해 관련자 스스로가 임시영업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고찰됨
- 안전성검사 주기를 단축할 경우 허가 전 안전성검사 시 문제점 발견, 운영 중의 유지보수, 정비 등에 대한 중간점검 기능, 기술지도 및 기술상담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
- 임시영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허가 시 서류검사 강화
-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허가 전 안전성검사, 보험가입증서 등 기존의 서류를 보완강화하여 임시영업 인·허가 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 일일안전검사서, 유원기구 관리기록서, 안전관리자, 운행담당자, 종사원 안전교육계획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강화
- 보험증서 판독, 기계의 사고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시 제출 서류를 보완하여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시험운행시 제작사가 제시한 절차와 방법에 적절한 정밀 검사를 시행
- 현행 운영되고 있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안전검사팀 인원을 보완하여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심도 깊은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전교육을 통한 자정 유도

- 안전관리자, 종사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법적대상자를 사업주 및 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도록 함
- 법적 의무교육 대상자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참여율이 높은 사업체나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전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안전교육 대상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현행 제도상 ‘작업장 배치일 6개월 내 1회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이 해이해 질 수도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일정기간 내 재보수 교육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유원시설업자의 자체 교육 시행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파견 또는 안전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등의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이 필요
    - 임시영업의 영세성, 일시성의 특성에 따라 종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가 종사원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하여 종사원 안전교육 매뉴얼 제작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 시설운영자 및 종사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계도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시설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족(21%)은 임시영업 안전관리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안전사고 중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40% (전체 5건 중 2건)를 차지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의식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고찰됨
  - 안전관리자, 종사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법적의무대상을 유원시설업 담당공무원, 사업주 등으로 확대하고 사례중심 교육, 현장체험,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
- 사고 발생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정확한 사고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사고업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제도화함
    - 국내 유원시설의 안전사고는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 대부분 관련자 간의 협의 등으로 처리되어 사고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
    -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신고 누락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사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고 발생 원인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고찰됨

백지

## 제6장

---

1. 기본방향
2. 개선방안

백지

## 제6장 개선방안

### 제1절 기본방향

- 한국 임시영업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문가 조사 분석 등을 기초로 임시영업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
- 임시영업 안전성 제고방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임시영업에 대한 안전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둘째 교육과 계도를 통한 자정을 유도함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고양하며, 셋째, 과학기술분야, 도시계획 분야 등이 전문지식이 결합된 산업이자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유원시설업의 특성에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기초 자치단체, 유원시설업체가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제고

### 제2절 개선방안

#### 1. 허가 전 안전성검사 강화

##### 가. 인허가 검사체계보완

##### 1) 필요성

- 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는 허가 전 안전성검사, 정기 안전성검사, 재검사로 구분·실시되고 있으나 임시영업의 경우, 허가 전 검사 대상에만 해당
  - － 임시영업은 평균 40.4일, 최소 8일에서 최대 102일 동안 영업
-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 안전성검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임시영업의 평균 영업일수인 평균 40.4일을 고려하여 검사

주기를 단축할 경우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현행 검사체계 능력 초과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용이 어려움에 따라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도 기존의 1년 주기가 가장 적정(48.0%)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기검사의 축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유원시설업체의 반발 및 불법영업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미국 뉴저지의 경우 인·허가시 물리적·기계적 서류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관련 서류검사를 강조하여 운행 중 작동·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

## 2) 개선방안

### □ 서류 검사 항목 보완

- 운행종사원 안전교육, 유원시설 기록서, 보험증서에 대한 검류검사를 추가하여 검사
-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4.1%가 허가 전 검사 시 유기시설(기구)의 사고 및 시설관리기록, 안전교육 계획 등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
- 종사원 교육계획서, 종사원 교육카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영업 이전에 사전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현재 각 유원시설업체에서는 종사원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교육실적을 사진자료화하여 제출하도록 유도
- 외국계 보험인 경우는 국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국내의 대해보험사를 지정하고, 대해보험사 지정이 어려울 경우 보험증명서의 원문 및 공증받은 원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 인·허가 담당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외국계 보험은 국내 보험의 증서와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나, 해당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해독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
- 외국에서 운행하던 유기기구사 국내 임시 영업을 위하여 도입·설치될 경우에는 외국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기관에서 사전 검토하는 단계를 제도화



## □ 시험운행 강화

- 실제 운행 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제도화
  - 전부화 테스트<sup>13)</sup>(Full load Test), 인터록 테스트<sup>14)</sup>(Inter Lock Test) 등 실제 운행 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시험운행을 지속 실시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현재 유기기구 제작사 매뉴얼에 시험운행의 방법, 횟수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각 유원시설의 시험운행에 대한 유기기구별 특성에 부합하는 시험운행의 적정 방법 및 절차가 미흡함에 따라 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시험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임시영업에서 설치·이동이 많거나 이용객이 많은 유원시설은 바이킹, 워터슬라이드 등 대부분 수작·좌우·요동 운동을 하거나 승용물 자체가 운동하는 시설로 인명사고 등의 우려가 있음

## 나. 안전성관리체계 구축

### 1) 필요성

- 유원시설업의 행정적,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 기초 자치단체의 주무과인 관광과의 경우 기반, 토목, 기계, 설비, 전기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여 유원시설업의 기술적 부분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타 업무에 비하여 유원시설업의 중요도가 낮고 게다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안전관리 능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유원시설 안전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종합유원시설 협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검사팀의 경우 원거리를 이동하여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비용 낭비의 우려가 있어 권역별 통합 검사 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됨

13) 기계에 실제 탑승인원을 탑승시켜 가동하는 실험

14) 출입문, 안전바 등이 안전하게 위치하고 난 뒤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

## 2) 개선방안

### □ 안전성관리협력 시스템 구성

- 기초 자치단체의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협력시스템을 구성하여 안전성 관련 인허가, 점검, 교육은 물론 사고실태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
- 지역 내에 재난관리과가 없을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과와 구성
- 현재 안전관리의 복잡한 절차 및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유원시설업의 이해와 신뢰 구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구축
-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향상을 도모

### □ 안전성 검사팀 재구성

- 현재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검사팀은 각 권역의 입지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검사 담당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안전성검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배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련 대학 및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안전성검사 전문인력을 확보
-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업체 수, 기계수, 검사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팀을 구성
- 권역별 책임자는 기계기술사 이상, 관련 업무 5년 이상과 같은 전문가로 선출 하되 책임자 교체가 가능한 충분한 인력풀을 확보
- 또한 이들 전문 인력과의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간과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웠던 사항에 대한 조언 등을 통해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원시설업 활성화를 도모

## 다. 인·허가 매뉴얼 제작

### 1) 필요성

- 기초 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축제·행사 개최로 인하여 부대시설로서의 임시 영업 도입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원시설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공무원은 거의 없어 유원시설 인·허가, 안전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미흡하므로 인허가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제고
  - － 유원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지구 판별, 안전성 대상·비대상 유기기구 분류, 보험가입증서 관독 등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업무임

### □ 개선방안

- 본 매뉴얼은 유원시설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유원시설협회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 전문기관(공단), 관련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제작
-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매뉴얼로 제작
  - － 유원시설이 설치 가능한 토지용도, 안전성검사 대상에 대한 법적 해석을 상세하게 절차별, 상황별로 설명하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 보험가입증서 확인 및 유원시설업 사업자 결격자 판별 등에 대해서는 사례중심의 해설을 통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제고
- 이와 함께 관련 기관의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
- 특히 담당공무원의 유원시설 안전교육 시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적용법 등을 교육하여 매뉴얼을 활용도를 제고

## 2. 관리 운영단계 보완

### 가. 일일 안전성 검사 강화

#### 1) 필요성

- 임시영업의 경우 평균 40.4일간 영업행태가 일어남에 따라 정기 검사 및 실태점검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전 안전성 검사와 함께 일일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 2) 개선방안

##### □ 일일 안전점검 결과 신고제 실시

-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있는 일일안전점검기록부를 1주일 단위로 기초 자치단체에 제출함으로서 유원시설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기초 자치단체는 일일안전점검기록부를 1주일 단위로 점검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점검이 필요할 시에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일일안전점검기록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에는 일정기간 내 임시영업 불허, 검사비 및 보험료 증액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 □ 유기기구별 일일 안전점검 양식 배포

- 유기기구별 적정 검사 항목, 점검방법, 점검결과 작성방법 등의 유원시설별 표준화된 양식을 작성하여 배포
  - 현재 각 유원시설에 대한 점검사항은 제시된 반면 점검평가기준은 안전관리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유원시설별 표준화된 판정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 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4단계 평가(양호 : ○, 보완 : △, 부적절 : ×, 조치 : Y)를 실시하되 양호 이외에는 조치사항 및 익일 실시한 조치 결과를 상세히 기입하도록 함
- 이러한 일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일일안전점검표시판에 매일 수정하여 게재함으로서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화

-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1일 안전점검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가 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상시 배치 될 수 있도록 고용을 의무화함
  -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서는 유원시설 내 안전검사 대상 유기기구 운행 중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동일 안전관리자가 타 영업장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
  - 이면 계약에 의한 안전관리자 배치시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 다. 실태점검 실시 효율화

- 임시영업시설 설치 및 이용이 집중되는 7,8월에 강도 높은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라. 사고 처리 시스템 구축

##### 1) 필요성

- 향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안전사고 실태 조사가 요구됨
  - 지금까지의 국내 유원시설 관련사고는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 대부분 관련자간의 보상 협의 등으로 처리됨에 따라 사고 실태 파악이 어려움
- 그러나 유원시설업의 성격상, 근시일내 업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기는 어려우므로 사고신고 의무제 및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

## 2) 개선방안

### □ 사고 신고제 강화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 사업주나 안전관리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 안전사고 내용 공개를 통한 사업주 의식 계도 및 사고처리의 투명성 제고 추진
  -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기초 자치단체는 안전사고 발생시 그 실태를 명확히 조사분석하여 필요시 사고원인, 사고처리에 대한 사항을 해당 업체로 하여금 공개토록 제도 마련

### □ 행정처분 강화

- 이용객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의식 및 기업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고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
  - －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사고업장에 대한 조치 기준이 없음
  - － 영업 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 횟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담금 대체를 지양하고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
  - － 전문가 조사결과 유원시설 안전사고 관련 행정조치에 대한 수위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고업장뿐만 아니라 사고원인 제공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명시
  - － 또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안전검사를 미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

- 이와 함께 관할 관리 주체별 관리부족 및 이용자의 부주의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을 작성

### 3.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 가.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업주,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한국유원시설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공무원, 사업주 안전교육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참여율이 매우 저조
  -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원시설업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중 “안전교육 실시”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사업주, 안전관리자, 종사자의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96%, 100%, 100%가 필요하다고 응답
-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능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됨에 따라 고도의 기술 과 안전의식이 요구되나 현행 제도상에는 ‘작업장 배치일 6개월 내 1회 교육’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유원시설업자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한국 유원시설 업계의 영세성, 일시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
- 이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 시설 운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10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22건 중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4건(18.2%)이나 신고 되었으나 이용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음

## 나. 개선방안

### □ 안전교육 의무화

- 기초 자치단체 유원시설 담당공무원, 사업주(운영 책임자), 안전관리자 대상의 안전교육을 체계화 또는 의무화
-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관련 대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
  -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각 권역별 관련 대학·연구소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을 개최함으로써 교육 참여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감을 줄이고, 교육 수요는 물론 교육 담당 인력을 확보
- 교육비용은 유원시설업의 영세성, 안전관리 개선의 시급성 등에 따라 초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되, 사업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과정은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과정,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 워크숍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은 안전관리 관련법과 규정, 안전관리의 기초이론과 목표의 설정, 시설개선과 관리방법, 환경·안전관리 등 인허가 및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교육을 이행함으로서 유원시설업의 체계적 발전 및 안전성 제고를 꾀함
  - 유원시설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 관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안전관리의 인허가 및 관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전 의식 교육과 국내 현장답사로 구성
  - 향후에는 행정자치부 공무원 선택전문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 유원시설 유관 기관 및 협회와의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
  -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을 고려하여 1년에 2회 실시하고 이 중 1회 교육 이수를 의무화
-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과정은 관련법과 규정, 안전관리의 중요성, 시설관리, 고객 안전관리 및 서비스,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룸
  - 사업주의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 안전교육을 ‘법적 의무화’하도록 하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교육에 참여를 위



하여 안전검사비용 지원 및 ‘안전관리 우수업장(가칭)’ 표창, 선진지역 시찰 기회를 부여 등을 시행

- 또한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 워크숍 과정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워크숍으로 하여 유원시설의 유형별 안전관리 방안 및 해외사례 보고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다룸
  - 유원시설업의 타 직무 경험이 있더라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 배치 6개월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
  -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과목과 지역별 업종별 특성화 과목으로 분리·구성
- 안전교육 교재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기계공학 분야, 관광분야, 도시계획·법제 분야의 전문가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제작

[표 6-1] 안전관리 교육 유형

유형	대상	기간	비고
직무훈련과정	공무원	1일 / 전반기 하반기 2회 실시	기존 2박 3일
전문연수과정	사업주	1일	기존 1박 2일
실무워크숍과정	안전관리자	3일	기존 8시간

#### □ 종사원 안전교육 지원

- 실제 이용객의 안전을 가장 표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의 안전 관리능력 배양은 ‘국민안전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개별 사업자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관광공사가 협조하여 기계공학, 관광, 사회복지, 생활체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종업원 안전교육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안전교육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영세한 유원시설업의 종사원 안전교육을 지원
  - 종합유원시설업 영업 상위 업체는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내용은 영업 전, 영업 중, 영업 후 확인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유기기구별 운행요령은 물론 이용객을 접객하는 종사원의 친절서비스(Hospitality), 사고 시 유도 및 응급처치 기술 등을 교육하여 이용객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임시영업의 짧은 영업기간과 종사원 대부분이 임시직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 전 안전교육과 함께 매일 영업시간 전 10분 내외의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
  - － 유원시설 유형별로 종사자(Operator)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 수칙을 간단히 요약배포하여 매일 영업 전 복창하는 등의 방식을 권고하여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제고
- 사업주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종사원 교육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

□ 이용자 안전인식 계도사업 실시

-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요령 숙지, 돌출행동 방지 등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
-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준수하고 이용할 수 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 각종 미디어를 이용한 대국민 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광고·홍보 캠페인을 시행
  - － 입장 전 확인 사항, 일반적인 안전수칙, 대기동선, 정원 외 탑승 제한, 어린이 탑승 시 주의사항, 운전개시 전 안전띠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안전상태 확인, 운행 중 자세, 탑승완료 후 퇴장 등
  -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유원시설협회가 2008년 배포한 유원시설 안전이용 동영상 활용
- 이와 함께 유원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률이 높은 초·중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학교, 단체 조직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매분기 작성·배포하는 "관광 안전 매뉴얼"중 이동식놀이기구 이용률이 높은 2, 3분기에 관련 안전수칙을 포함

□ 이용객 안전·주의 사인물 통일

- 현재 업체별로 이용객 주의 사인물의 형태가 각기 달라 이용객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안전수칙", "일일안전점검표시판" 등의 사인을 통일된 형식으로 제작
  - － 이용자가 지각하기 쉬운 색채, 규모의 형태를 적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체 사용
  - － 이와 함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 제시

참고자료

---

전문가 설문



2. 「유원시설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허가권자의 역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 ① 현행대로 기초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행한다.
- ② 광역 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 등)이 시행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한다.
- ④ 기초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허가권을 가지되 광역 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 등)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신중한 설치·운영이 되도록 유도한다.
- ⑤ 기초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허가권을 가지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과정을 통하여 신중한 설치·운영이 되도록 유도한다.
- ⑥ 기타( )

2-1. 「허가권자의 역할 조정」이 이루어 질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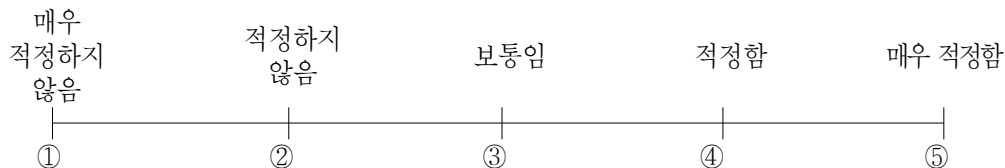
---

II. 다음은 「안전성검사 강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 또는 답변해 주십시오.

1. 현행 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에 관련하여 한국종합유원협회에서는 ‘허가 전 검사’외 연 1회 정기 점검 및 지자체와 연계한 수시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1] 국내 임시영업 유원시설 현황 참조)

1-1. 현재 시행되는 안전성검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안전성검사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1. 안전검사 주기는 \_\_\_\_\_개월에 1회 시행한다.

1-2-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1-3. 안전성검사 주기를 단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래 제시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기술해 주셔도 됩니다.)

예 : ① 빈번한 안전검사로 인한 유원시설업체의 영업 제한

→ 해결방안 : 기구 운행 유형별, 검사항목별 등 검사방법 및 대상의 차별화, 비영업시간(영업시간 이전, 영업시간 종료 후) 안전성검사 실시 등

② 영세 유원시설업체의 경우 검시 비용부담 증대

→ 해결방안 : 영세 업체에 대한 안전검사 비용지원, 무사고 유기시설(기구), 검사항목, 검사항목 유형에 따른 검사비 할인제도 마련 등

---

---

---

---

---

2. 「허가 전 유기시설(기구)의 안전검사」를 강화할 경우 어떤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유기시설(기구)의 사고 및 시설관리기록, 시설 안전교육 기록 등에 대한 서류제출

② 유기시설(기구) 운행검사 추가

③ 유기시설(기구)안전검사 항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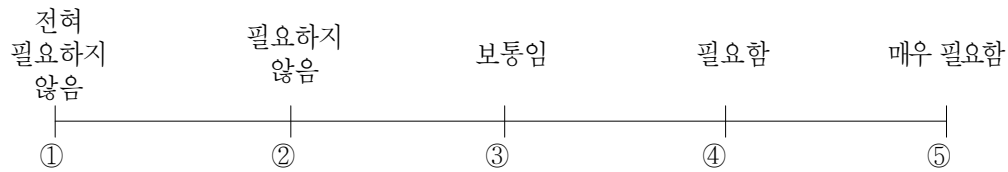
④ 유기시설(기구)안전검사 대상 확대

⑤ 기타 ( )

3. 「안전검사 강화」를 위하여 유기시설(기구)검사 대상 및 검사절차 및 항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참고자료 2] 참조



3-1.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서 어떤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해당시설의 사업주 교육                      ② 해당시설의 안전 관리자 교육  
③ 해당시설의 시설운행자 교육                ④ 검사전문인력 양성  
⑤ 안전성검사 항목을 추가                      ⑥ 안전성검사 대상을 확대  
⑦ 기타( )

4. 「안전검사 강화 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래 제시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기술해 주셔도 됩니다.)

예 : ① 안전검사 위탁업체(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업무과다

→ 해결방안 : 안전검사 위탁업체 추가지정, 각 분야별(안전검사, 안전교육 등) 담당기관 별도 지정 등

② 안전검사 확보 및 검사원 운영문제

→ 해결방안: 지역별 안전검사 전문 인력풀 작성, 유원시설 안전검사원 관련 전담기구 구성, 「안전검사원 자격시험」을 통한 전문인력 확충

---

---

---

---

---

5. 「유원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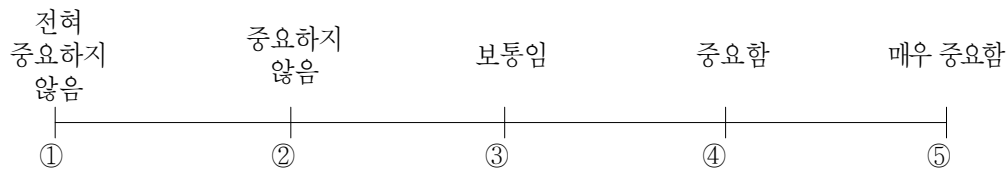
- ① 사·도별 안전관리가 가능한 인력풀을 작성하여 전문인력 관리
- ② 위탁기관(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전담인력 양성
- ③ 관련대학, 연구소, 정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구축
- ④ 「유원시설 안전관리 자격」 시험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 ⑤ 기타 ( )

Ⅲ. 다음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 또는 답변해 주십시오.

<표 1>

교육 대상	담당기관	의무교육시기	근거법
사업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법적 의무대상 아님	—
담당공무원	"	"	—
안전관리자	"	1회 8시간 (사업장 배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종사원	유원시설업자	매주 1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비정규종사원	"	1회 (배치 전)	"

1. 귀하께서는 「사업자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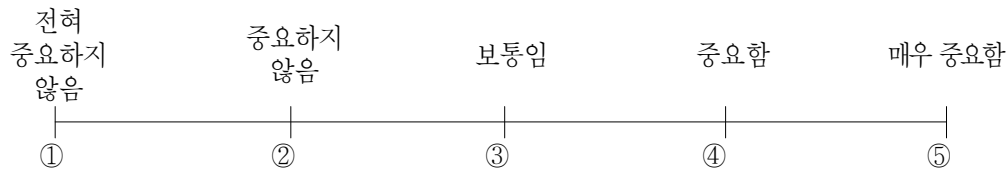
1-1.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교육 참여율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복수응답가능)

※ 관광진흥법 상 사업주 경우 「한국유원시설협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관계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 ① 현행대로 시행한다
- ② 사업주 안전교육을 법적 의무화한다.
- ③ 안전교육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 ④ 워크숍, 현장시찰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⑤ 기타( )

2. 귀하께서 「안전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복수응답가능)

※ 안전관리자의 경우 「법적의무교육 대상」 으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에서 「안전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장 배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교육」 만을 명시하여 재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① 현행대로 시행한다.
- ②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일정기간 경과 시 재교육을 의무화한다.
- ③ 현 교육기관(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과 학계, 관련 연구 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교육전수 인력을 확보한다.
- ④ 워크숍, 현장시찰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⑤ '안전교육'이 아닌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안전 관리자를 양성한다.
- ⑥ 기타( )

3. 귀하께서는 「종사원 안전교육」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종사원 교육」의 경우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내용 및 질적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사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복수응답가능)

※ 종사원 및 비정규종사원의 경우 「법적의무교육 대상」으로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국내 유원시설업체의 영세함으로 인해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유원시설 업체의 경우 교육 시행여부, 교육의 내용 및 교육수준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 ① 현행대로 시행한다.
- ② 종사원 안전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영세 사업주의 교육을 돕는다.
- ③ 사업주의 자체교육과 함께 연 1회 안전교육주관기관(안) 교육을 병행하여 질적 수준을 고양한다.
- ④ 종사원 교육 실적이 양호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⑤ 기타( )

IV. 다음은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 또는 답변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1-1. 만약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 월드카니발 부산 사고의 경우 운영책임자(IEMG), 기술본부장(IMEG), 자이언트 휠 조립책임자(홍콩월드카니발) 등 총 3명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자이언트 휠 조립자(홍콩월드카니발) 2명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음

---



---



---



---

## V. 기타질문

1. 유원시설(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는 안전관리 미흡, 기구 운행자의 운행 미숙 외에도 유기사설(기구)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이용객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방송,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원시설 안전 수칙 배포, 사고업체·사고유기사설(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등

---



---



---



---

- ◆ 「이동식 놀이기구 등 단기 영업유원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 본 항목에 응답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인적사항 (5개 문항)

■ 조사 결과 분석 및 소정의 보답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을 작성해 주십시오. 모든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 ▶ 일반 현황 ◀

- ▶ 성                      명 \_\_\_\_\_  
 ▶ 소                      속 \_\_\_\_\_  
 ▶ 근 무 분 야(근무년수) \_\_\_\_\_  
 ▶ 연                      락                      처 \_\_\_\_\_  
 ▶ 우 편 주 소 (\_\_\_\_-\_\_\_\_) \_\_\_\_\_

■ 소중한 고견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2002), 공원 및 유원지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노형진(2005), SPSS 12.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출판사  
문화관광부(200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관광부(2003),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실시 규제 준응도 조사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5), 유원산업 통권 제 28호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5),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준 개정 등 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보고서 요약서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7), 제2회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Ⅰ,Ⅱ)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7), 제2차 안전관리자 교육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5), 유원시설협회보 통권 제28호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6), 유원시설협회보 통권 제30호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07), 유원시설협회보 통권 제32호  
이호승(2002), 「테마파크의 라이드 어트랙션 디자인」, 한국디자인학회 제15권 제3호 통권48호  
한국관광연구원(2000),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관광산업정책의 변화방향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2003), 유원시설 안전실태조사  
ASTM International(2007), Amusement Rides and Devices : 7th Edition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2005), Project Report : Human Factors Review of Restraint Failures on Mobile Amusement Rides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2001), DIRECTORY OF STATE AMUSEMENT RIDE SAFETY OFFICIALS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2006), DIRECTORY OF NORTH AMERICAN AMUSEMENT RIDE SAFETY OFFICIALS  
<http://www.tpiro.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moleg.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tpiro.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iaapa.org> IAAPA 홈페이지  
<http://www.aimsintl.org> AIMS 홈페이지  
<http://www.naarso.com> NARRSO 홈페이지

<http://www.rideaccidents.com> 홈페이지

<http://www.saferparks.org> 홈페이지

백지

## 연구진

연구책임     김    현   책임연구원

연구원       황혜정   연구원  
               강민애   연구원  
               고낙현   연구조원

연구자문     손용훈 (일본교통공사   연구원)  
               남정환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